

유류세 인하폭 축소... 겨우 잡은 소비자물가 다시 들썩이나

정부, 소비자물가 2%대 목표
휘발유 유류세 리터당 41원 오르고
국제유가 당분간 오름세 지속 전망
물가안정화 기조에 '걸림돌' 생겨



1일 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됐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가량 가격이 올랐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뉴스시

정부는 소비자물가를 2%대에 묶어 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물가안정화 기조에 걸림돌이 생겨났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물가 자극 요인으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1일 유류세의 인하 폭 축소가 시행에 들어간 데다, 서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능성까지 최근 불거진 탓이다.

올해 2분기 들어 안정화 흐름을 보이던 휘발유 값은 지난달 중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기름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 이날 시작됐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된 것이다.

이는 소매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하 폭 조정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올랐다. 인하 폭 축

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의 하락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제유가는 반등 추세에 있다. 한 달 전쯤인 6월5일 배럴당 74.07달러까지 하락했던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28일 81.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일(현지시간) 장중에도 81달러 안팎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배럴

당 78달러 내외에 머물던 북해산브렌트유는 85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갔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위험을 시시각각 반영해 왔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군사갈등이 격화하면서 상대 기지를 겨냥한 로켓·드론 공격 등이 오갔다. 양측의 경고성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면서 확전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등 서방 곳곳에서 나온다.

국내 기름값도 국제유가 상승분에 연동되기 시작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ℓ당 1677.89원으로 집계됐다. 전 저점인 1648.27원(6월18일)에 비해 ℓ당 29.62원(1.79%) 올랐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3일 연속으로 상승했고,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과일·채소 값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다소 억제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3% 선을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4월과 5월 들어 각각 2%대로 내려앉았다. 문제는 금명간 발표될 6월 수치가 아닌 7월과 8월 등 3분기 물가 수준이다. 뛰는 유가는 전체 물가 상승을 크게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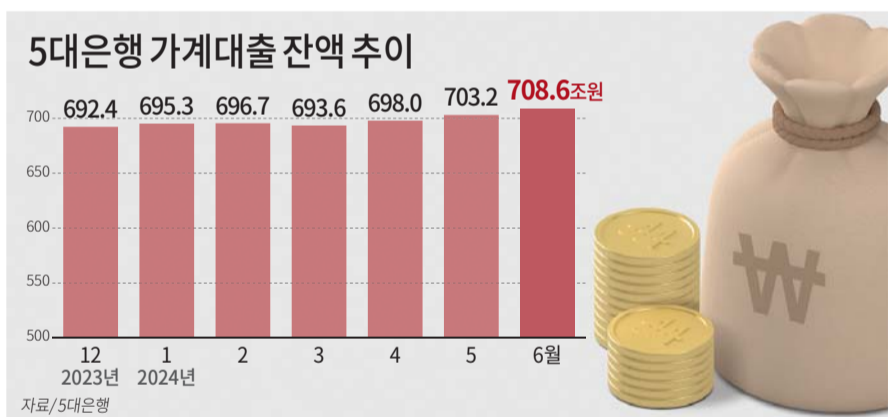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펴낸 '2024년 2분기 국내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중동지역에 추가적으로 원유 수급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가능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으나, 최근 들어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세종=김연재 기자 kys@metroseoul.co.kr

영끌 막차수요 몰렸다... 가계대출 한달새 5.3조 증가

5대은행 가계대출잔액 708.6조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미루고
주담대 금리 하락, 주택매매 늘어
"수요 더 몰릴 가능성 배제 못해"



늘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월 말 693조5684억원에서 4월 말 698조30억원으로 늘었고, 5월 말에는 703조2308억원으로 불어났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주택매매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올해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증

가한 뒤 5월 4만3278호로 소폭 줄었다. 주택매매거래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3~4월 주택매매 거래가 주담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담대 금리도 2년 만에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지난달 말 기준 연 2.94~5.76%로 집계됐다.

고정금리는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하락하며 떨어졌다. 은행채 5년물(무보증·AA A)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3.451%로 올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5월말(3.803%)과 비교하면 0.352%포인트(p) 떨어졌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오는 9월로 미뤄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오는 8월까지의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해당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포인트(p) 내외로 발생할 경우 금리에 0.38%p를 추가했지만, 9월부터는 금리를 0.75%p 더해야 한다. 9월부터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영끌 막차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증가세는 대출금리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주택가격이 회복되며 매매가 늘고, 스트레스 DSR 2단계도 미뤄지면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지우 기자 yul15@

23조 사들인 외국인, 상위 4종목 주가 평균 30% ↑

거래소, 외국인 매수 작년의 2배
개인 투자자는 7.4조 팔아치워
SK하이닉스 67%, 현대차 45% ↑

올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순매수 상위 4개 종목'의 주가가 평균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규모로 국내 대형 우량주를 사들이며 수익률에서 발군의 성과를 거둔데 이어 하반기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세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호재에 힘입어 수익률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연초부터 6월까지 한국 증시에서 23

조282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517억원의 순매수 금액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들의 코스피 지분율은 연초 32.72%에서 6월 말 35.63%까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7조379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약 7조9971억원이었고 이어 SK하이닉스(약 3조8039억원), 현대차(약 3조4541억원), 삼성물산(약 1조3201억원) 순이다. 상반기 동안 코스피는 약 4.79% 상승했으며, 외국인 집중투자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도 지지부진한

코스피지수와 달리 가파른 우상향세를 보였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4개 종목의 주가는 상반기에만 평균 31.39%가 올랐다. 삼성전자는 3.82%로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SK하이닉스 67.13%, 현대차 44.96%, 삼성물산 9.65% 등은 급등했다. 이외에도 순매수 상위 10권 내 종목인 HD현대일렉트릭이 27.12%, 기아 29.3%, 알테오젠 184.77%, 크래프톤 45.40% 등도 주가가 뛰었다. 외국인들은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식과 반도체 주식을 끌어담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신하은 기자 godhe@

사실상 정무수석 역할... 필요성 의문 제기도

>> 1면 '거야 소통 강화...'서 계속

정무장관이 사실상 정무수석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보다 총위가 높은 장관 단위에 정무적 소통을 맡겨, 국회의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무장관은 사실상 정무수석의 역할과 다를 바 없고, 전문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아닌 데다 그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시예진 기자 syj@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무수석의 기능이 유명무실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무장관의 임명이 상황을 바꿀 카드가 될 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